

韓國의 國家戰略과 軍事戰略企劃의 方向

河 大 惠*

〈目 次〉

- I. 序 論
- II. 戰略의 概念과 體系
 - 1. 戰爭과 戰略
 - 2. 戰爭과 安保
- III. 韓國의 國家戰略과 安保政策
 - 1. 韓國의 國家目標과 安保威脅
 - 2. 敵國選定과 韓國의 安保政策
- IV. 韓國 軍事戰略企劃의 發展方向
 - 1. 韓半島의 戰場環境과 戰爭類型
 - 2. 韓國 軍事戰略企劃의 發展方向
- V. 結 論

要 約

戰爭의 수행과 戰爭指導의 目的이 國家利益 설정의 本質인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면, 戰爭目的과 戰爭의 政治的 目標設定도 평시의 國家目標 달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科學的이고 體系화된 戰略理論을 적용하여 國家存立目的으로부터 國家利益—國家目標—國家安全保障政策—軍事戰略企劃에 이르기까지 韓國의 國家戰略과 軍事戰略企劃 분야를 南北韓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平·戰時를 연계한 國家戰略과 軍事戰略企劃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본 論文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구성체계로는 戰略·政策·戰爭指導에 관련된 基本理論을 제시한 후, 理論을 실제와 연계시켜 韓國의 國家戰略과 安保政策을 정립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韓國軍事戰略企劃의 定立方向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韓國의 國家戰略과 軍事戰略企劃의 方向을,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작게 5027의 상위개념으로 활용한다면, 전략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軍事的 自信感을 확대시켜 軍事先進國의 自負心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 副教授, 政治學

I. 序 論

1. 研究背景과 目的

4세기 말엽의 로마시대에 유명한 「軍事論」(On Military Affairs)의 저자 「베지티우스」는 “만일 그대가 平和를 원하거든 戰爭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戰爭이란 孫子が 말한 「兵者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 하듯이, 국가의 大事로서 민족과 국가의 存亡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人類의 興亡과 繁榮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흔히 말하기를 “비록 國家가 強大하다 하여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亡하고, 天下가 평화롭다 하여도 전쟁을 잊으면 국가가 危殆롭다”고 했다. 한 국가의 興亡盛衰는 그 국가의 국민들 자체가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 전쟁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서 좌우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人類가 그 역사를 갖기 시작한 이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國家戰略의 企劃으로부터 전투수행에 이르기까지의 戰爭指導에 관한 이론과 실체는 국가적 重大課題가 아닐 수 없다.

現代인 戰爭指導는 國家存立 또는 國家目標과 동일한 개념의 戰爭指導가 아닌, 평시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전쟁의 수행과 戰爭指導의 目的이 국가 이익 설정의 본질인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면, 戰爭目的과 전쟁의 政治的 目標設定도 평시의 國家目標 達成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쟁목적이 평시 國家目標과 별개의 것이거나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戰爭目的이 國家利益을 수호하고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國家目標과 전쟁목적은 一貫性있게 連繫性을 유지함이 필요하다. 만약, 전쟁의 정치적 목표설정이 國家目標 達成을 저해하여 국민의 행복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戰爭計劃을 再檢討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國家戰略 및 軍事戰略企劃體系를 중심으로 일괄된 개념으로 전쟁계획과 전쟁지도 개념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戰爭指導 概念을 平時 國家戰略으로부터 戰時 軍事戰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國家存立目的으로부터 國家利益 - 國家目標 - 國家安保政策 - 軍事戰略企劃에 이르는 전략이론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科學的이고 體系化된 전략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國家目標로부터 軍事戰略

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전략관계를 상호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平・戰時를 연계한 국가전략과 전쟁지도 개념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2. 研究範圍와 接近方法

國家戰略 次元에서 다루어야 할 전략과 전쟁지도에서는 平・戰時를 연계한 政治・社會・經濟 軍事分野를 企劃 - 計劃 - 施行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의 대상과 수행체계를 연구범위로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戰略과 戰爭指導에 중점을 두고 국가전략수준의 安保政策, 軍事戰略分野로 한정시켰다. 軍事戰略에서는 軍事作戰計劃과 戰鬪遂行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하고 軍事戰略企劃分野만을 포함시켰다.

연구의 구성체계로는 제1장에서는 戰略・政策・戰爭指導에 관련된 基本理論을 제시한 후, 제2장에서는 理論을 실제와 연계시켜 韓國의 國家戰略과 安保政策을 정립시켰으며, 제3장에서는 韓國의 國家戰略과 戰場環境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韓國 軍事戰略企劃의 發展方向을 제시하였다.

II. 戰略의 體系와 概念

1. 戰爭과 戰略

가. 戰爭과 戰略의 概念

(1) 戰爭의 概念

現代 戰爭의 概念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戰爭과 軍事 및 安保의 概念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戰爭과 軍事, 戰爭과 安保의 概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 戰爭과 軍事

古代戰爭부터 근대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戰爭은 순수한 군대와 군대간의 무력충돌 현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國家防衛는 軍事防衛를 의미하며, 戰爭은 軍事의 고유영역이었다. 근대 이전의 戰爭은 군인들의 전투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고,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 심지어는 주요한 정치적 집단까지도 戰爭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대라는 軍事的 手段만이 사용되었다. 戰爭에 참여하지 않은 비전투원들은 戰爭과는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國家資源을 과도하게 소모하거나 국민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키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現代 國家의 戰爭에서는 國家總力戰 수행체제가 불가피하여짐에 따라 국민적 군대가 창설되었고, 국력의 근본적인 파괴와 국민의 戰意를 분쇄하지 않고는 승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즉, 國家防衛는 軍事的 手段에만 의존할 수 없고, 軍事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非軍事的인 手段을 포함한 총체적인 國家防衛 概念으로 변하였다.

戰爭 當事國들은 軍事力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심리, 경제 등의 제반 역량을 동원하여 戰爭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國家의 모든 역량을 조직화하여 戰爭 승리에 기여토록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國家安保를 위해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런던대학에서 최초로 「國防政策」이라는 강의를 담당한 모리스(Moris)교수는 그의 최초의 강의에서 “戰爭은 군대의 독점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며, 戰爭에 관하여 전혀 이해가 없는 정치가란 독재자의 명예욕과 마찬가지로 平和의 천적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戰爭은 군대의 독점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유영역으로서 軍事的 領域을 상회하는 國家的 領域으로 상승하였다.

(나) 戰爭과 安保

일반적으로 國家安保의 정의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차이가 있으나, 전통적인 概念은 대외적 軍事威脅으로부터의 國家防衛 행위라는 消極的 目標概念으로 정의하여, 여전히 軍事的 手段에 의한 軍事安保를 中心 概念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軍事的 危險이 고조되거나, 戰爭狀態 또는 準戰爭狀態가 지배하거나, 霸權的 國際政治가 지배하는 국제환경일 경우, 또는 냉전적 국제환경하에서는 國家安保가 보다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어 국방의 概念과 동일시되어 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現代에 올수록, 그리고 강대국일수록 국방과 총괄적 國家安保概念을 사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있다. 現代의 安保概念은 軍事安保 위주의 협의의 國家安保概念보다는 대내외적인 위협에 대한 軍事的 방호 이상의 정치외교·사회·경제 등을 포함하는 총괄적 國家安保 概念으로 발전하고 있다.

탈냉전시대 이후의 國家安保 概念은 軍事的 威脅은 물론 인간의 생존과 복지 등의 非軍事的 분야까지를 포함한 총괄 安保概念으로 발전하였으며, 國家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威脅이 없는 상태로까지 安保概念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國家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범죄와의 戰爭, 不正腐敗 剔決, 貿易逆調 解決 등을 國家安保의 次元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現代의 國家安保의 概念은 '國家의 총괄적인 국력요소에 의한 총체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現代의 國家安保 概念에서는 戰爭에 관련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戰爭問題는 國家安保 要素의 한 분야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평시의 戰爭抑制에 비중을 둔 나머지 앞으로 예상되는 전시상황에서 國家總力戰을 대비하고 수행하기 위한 광의의 戰爭計劃과 戰爭指導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집중적으로 연구·발전시키는 기능과 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2) 戰略의 概念

戰略은 인간사회에서 鬭爭意志를 갖는 양개 집단간의 무력충돌 현상인 전쟁이라는 피의 게임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피'의 제원리를 다룬다. 戰略이란 싸움할 '戰'자와 피라는 '略'자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싸움하는 피'라고 하여 '將軍의 用兵術'이라는 전쟁수행의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戰爭史에서 나타난 戰略體系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전쟁에서부터 나폴레옹 등장 이전까지는 戰術의 時代였다. 이 시대에는 상호 예견된 전장에서 병사들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戰鬪隊形과 戰鬪隊形間的 충돌현상인 접적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을 발전시켰으며, 지휘관의 실병지휘능력인 用兵術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등장한 이후의 近代戰爭에서는 사전 치밀한 기동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예기된 전장이 아닌 적 후방지역내에 있는 중요 목표물로 예기치 않은 시간에 기동하여 적을 驚愕과 混亂 속에 빠지게 함으로써 작전태세상의 優越을 달성하여 접적전투없이 승리할 수 있는 機

動戰에 의한 作戰術을 발전시켰다. 결국 나폴레옹의 機動戰에 의한 作戰術은 術의 次元이라기 보다는 科學적이고 體系的인 理論的 思考에 기초한 우월한 작전계획의 시행에 의한 승리였다. 이와 같이 전투(Battle)와 기동(Maneuver)이 구분되자 戰術의 상위차원으로 작전계획에 의한 적의 기동을 화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화력전과, 적시·적소에 우세한 戰鬪力(適材)을 배비하기 위한 기동전의 작전교리가 발전되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군대 대 군대의 충돌 양상에서부터 國力 대 國力의 투쟁인 國家總力戰 概念으로 발전됨으로써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일부가 되었다. 國家總力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사회·경제 등 광범위한 정책들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등장으로 무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軍事戰略보다는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외교심리적인 차원에서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는 抑制戰略이 군사전략의 핵심과업이 되었다. 따라서 전쟁수행을 위한 전략의 개념은 단순한 무력사용에 의한 군사전략의 차원을 벗어나, 이제는 정치전·외교심리전·무력전을 포함한 광의의 국방개념인 ‘國家總力戰’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國家總力戰 遂行樣相과 병행하여 현대의 무력전 양상은 고도의 첨단무기에 의한 과학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武器體系의 優劣이 전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장차전 수행에 필요한 최첨단무기의 소요를 과학기술이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장차전의 發展趨勢에 부합되지 않는 기존 무기체계의 특성과 효과요소에 맞춘 군사작전은 敗戰을 자초할 뿐이며, 장차전의 수행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武器體系는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대 軍事戰略은 企劃의 時代로서 예상되는 장차전의 양상에 天·地·人物要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기획하여 전투력 소요를 제기하고, 가용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武器體系를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戰略體系의 발전과정은 고대로부터 중·근세까지 점적전투에서 전장 지휘관의 用兵術이 각광을 받았던 전술시대, 나폴레옹시대부터 사전 주도면밀한 계획의 수립에 의한 작전수행(機動과 戰鬪)의 시대, 國家總力戰 遂行과 抑制戰略을 포함하는 정치·외교전과 군사전략을 통합한 국가전략시대, 그리고 장차 예상되는 고도의 과학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군사력의 소요를 제기하는 軍事戰略企劃의 時代로 발전되어 왔다.

나. 戰略의 體系

戰略이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鬭爭策略을 의미한다. 현대전쟁은 政治戰·外交心理戰·武力戰을 통합한 국가를 기본단위로 한 통합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이란 국가전략을 의미하며 政治戰과 外交心理戰에 관한 政戰略과 武力戰에 관한 군사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國家戰略은 政戰略과 軍事戰略이 통합되어야 한다. 국가전략의 일부로서 정전략은 평시 및 전시 國家安保政策으로 발전되며, 무력전 수행을 위한 軍令業務體系는 軍事戰略體系로 발전시켜야 한다.

戰略體系를 손자는 政戰略과 軍事戰略(作戰), 戰術로 구분하였다. 손자는 謀攻에서 “敵國을 온전한 채로 포섭함이 최상이며, 적의 국토를 파괴하고 얻는 것은 次善이다. 이러하므로 百戰百勝이 결코 최상의 방법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凡用兵之法, 全國爲上, 破國次之, 是故 百戰百勝, 非善之 善者也, 不戰而 屈人之兵者, 善之善者也)”라고 주장하면서, “최상의 전법은 적의 謀略(政治戰)을 분쇄하는 일이고, 그 다음이 外交關係(外交心理戰)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군사정벌(軍事戰略, 作戰)이며, 최하는 적요새(戰術)를 공격하는 것(故 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이라고 하였다.

(1) 國家戰略企劃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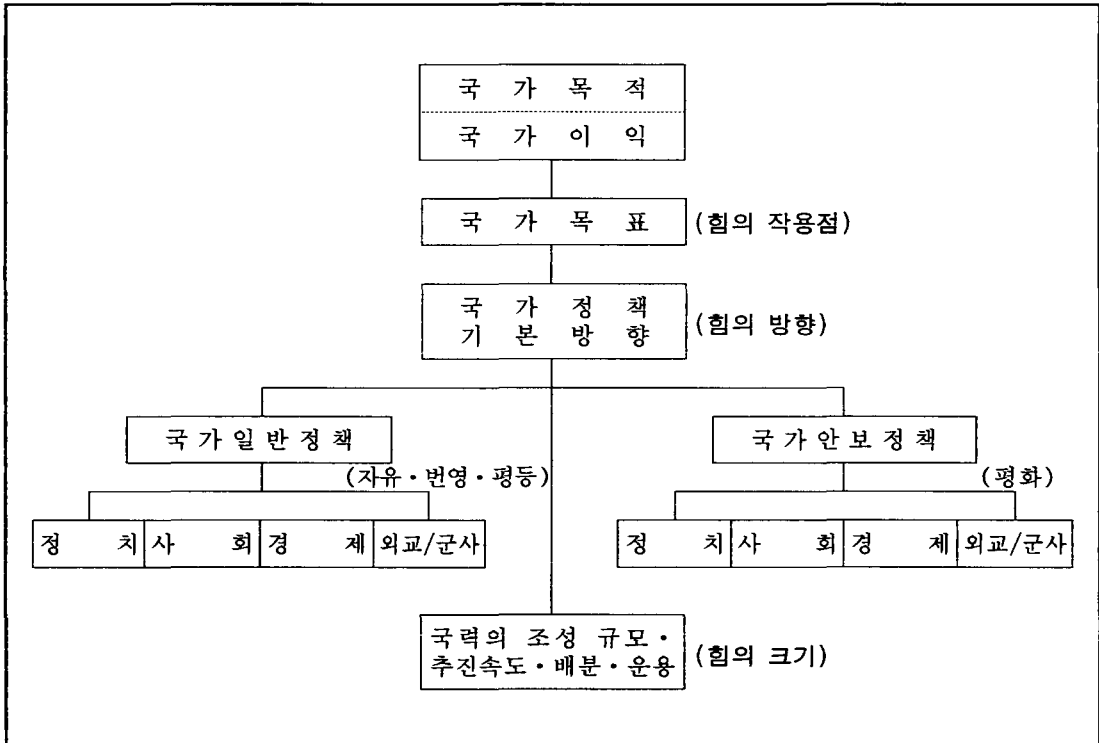
國家戰略(國家戰略)이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策略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國際社會에서 生存하고 繁榮’이라는 국가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國家戰略을 기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國家戰略의 企劃體系는 자연 및 사회현상에서 투쟁하기 위한 최선의 方策인 힘의 원리에서 도출된 힘의 효과요소를 활용하여 <표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힘의 효과 활용면에서 國家戰略은 ‘國家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目標을 설정하고, 國家政策基本方向을 제시하며, 國家政策 推進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력의 조성규모 및 추진속도, 국력의 배분 및 운용에 관한 方策’을 포함한다.

앙드레 보프르(Andre Beaufre)는 「戰略入門」에서 “戰略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 또는 목

1) 국가전략중 무력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군사전략이라 하였으며, 정치전과 외교심리전 등 비무력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총괄하여 정전략(政戰略)이라고 용어를 설정하였음.

〈표 1-1〉 國家戰略企劃體系



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思考方式이며, 이와 관련된 각종 현상과 자원을 계통적으로 배분해서 優先順位를 確定하고 가장 効果적인 행동방책을 선택하는 행위 지향적인 科學과 技術”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우리 시대의 필요성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戰略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force)을 활용하는 術”이라고 정의하고,²⁾ 이 힘에는 軍事力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프르가 제시하고 있는 戰略의 개념은 “①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의 적용술이고, ②사고의 방법이며, ③힘을 사용하는 두 적대이지 간의 辨證法的인 사고방법의 術”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戰略은 전체로서의 전쟁수행을 다루는데, 그것은 가용한 모든 戰爭手段들을 설정된 목표에 집중시키는 方策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戰略이란 정치·사회·경제·군사에 관한 통합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國家戰略을 의미한다. 國家戰略은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국가적 책략으로서 국가의 존립목적에

2) Andre Beaufre, *An Introduction to Strategy*, trans., by R. H. Barry(New York: Praeger, 1965), p. 13.

다른 國家利益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國家利益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여 國家目標을 설정하고,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요소별 諸政策을 통합·조정하여 평·전시를 포함한 國家安全保障政策을 발전시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력을 조성·배분·운용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사회현상에서 경쟁과 투쟁을 위한 방법으로 政略과 戰略의 용어를 사용한다. 政略이란 권력의 획득과 유지 등의 정치상의 책략이거나 상호경쟁으로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한 策略을 뜻한다. 이는 자국 내의 정치권력 및 국가 일반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 대비가 아닌 평시에 競爭次元에서 사용된 行動方策이라 할 수 있다. 戰略이란 그 용어가 뜻한 바대로 전쟁을 전제로 한 투쟁을 위한 策略이다. 과거의 전쟁은 무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軍事戰略이 國家戰略 전체를 의미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전은 政治·社會·經濟·軍事戰力을 활용한 政治戰·外交心理戰·武力戰 등이 통합된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國家戰略은 전쟁유형 중 武力戰遂行을 위한 ‘軍事戰略’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시 전쟁을 준비하고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정치·외교·경제·사회심리를 포함한 비군사적인 戰略을 ‘政戰略’ 분야로 용어를 설정하였다. 國家戰略 次元의 政戰略은 國家總力戰 수행을 위한 국내적 기반을 조성하고, 戰爭遂行을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치·외교전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

(2) 軍事戰略體系

(가) 軍事戰略企劃

현재 국방분야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軍令分野의 실제업무체계를 보면 軍事戰略分野에서는 企劃業務, 軍事作戰業務分野에서는 計劃業務, 그리고 군사작전 시행분야에서는 전술적인 機動과 戰鬪遂行을 다루고 있다. 軍令業務의 실체는 군사전략이론이 뒷받침하고 선도하여야 한다. 현재 군사의 군령에 관한 업무체계를 用兵術體系라 명명하고, 軍事戰略·作戰術 戰術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用兵術이란 ‘실제 전장에서 가용 전투력을 전투에서 운용하는 과학과 실병지휘기술’로서 시행의 과학임과 동시에 상대방보다 창의적인 術의 영역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군령의 실제업무인 군사전략의 기획(구상)과 작전계획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령업무의 용어 선정이나 개념정의는 실제업무체계와 이론체계를 상호연계시켜 軍事戰略企劃-軍事作戰計劃-戰術로 일관성있게 軍事戰略體系를 구분하여 정립하였다.

일반적으로 ‘企劃’이란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方策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軍事戰略企劃’이란 장차 예상되는 무력전의 양상을 미리 예측하여 天·地·人物 요소의 활용과 운용을 위한 方策과 수단을 구상함을 의미한다. 軍事戰略企劃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장차전에서 軍事力의 사용을 구상하는 사고방법으로서, 戰爭遂行의 3대 요소인 天·地·人物 要素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운용하기 위한 方策을 구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軍事力 所要를 제기하고 건설하기 위한 기획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분야에서 한국 軍事戰略分野를 고찰해 본다면, 한국 軍事戰略企劃의 기본과업은 중장기 대상기간인 2010년(適時)을 전후하여 한반도(適所)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의 장차전 양상을 전망할 때, 현재의 군사과학기술과 軍事戰略 발전을 감안하여, 天·地·人物 要素를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구상하여, 質과 量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軍事力 所要(適材)를 제기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나) 作戰計劃

作戰이란 일반적으로 ‘싸움이나 경기의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講究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이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방법·차례·규모 등을 미리 생각하여 세부적인 體系를 定立’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軍事作戰計劃에서는 軍事戰略企劃에서 제시한 天·地·人物의 활용과 운용에 대한 細部方策으로서, 適材·適時·適所를 위한 機動과 配備對策을 樹立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앙드레 보프르는 전통적인 軍事敎理의 變遷過程을 분석해 보고, “작전의 주요 요소를 기동(movement)과 힘(force)이 저울의 양단에서 상호작용해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作戰要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최선의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군사행동에 있어서 선택과 이에 따르는 作戰遂行의 기초는 ‘行動의 自由(freedom of action)’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의 핵심은 行動의 自由를 위한 투쟁이고, 작전게임의 기초는 ‘자신의 行動의 自由를 확보하고 상대방 行動의 自由를 박탈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작전은 전투를 성공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동을 다룬다.

作戰計劃이란 상대적으로 戰爭遂行 3대 요소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전장에서 行動의 自由를 확보하려는 行動方策을 포함한다. 또한 作戰計劃이란 작전지역에서 기동을 통하여 適時·適

所에 결정적인 전투력을 집중시켜 전투태세의 우월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투를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行動方策을 설정하는 것이다. 作戰行動方策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로 하는 병력과 장비를 기동시켜 배비하는 行動計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機動과 配備에서 승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전의 핵심인 機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上位次인 軍事戰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機動의 여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한다.

(다) 戰術

戰術은 軍事戰略企劃과 作戰計劃에 의해 채택된 戰略構想이나 作戰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과 교전시 사용하는 戰鬪技術(Art)이다.³⁾ 그러므로 戰術은 ‘戰場 내에서 최대한의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전투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術’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장에 진열된 상품을 판매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행위를 하는 판매기술을 商術이라 하는 것과 같이, 作戰計劃의 수행을 위한 接敵機動을 실시하고, 적과 접촉시 전장에서 戰鬪隊形을 갖춘 후 가장 효과적으로 무기효과를 활용하는 戰鬪技術을 戰術이라 한다.

戰場에서 戰術의 효과는 지휘관의 실병지휘기술인 用兵術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戰場에서 지휘관의 실병전투지휘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불확실한 전투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術(Art)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상대방보다 앞선 창의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戰場의 實際에서 적용되는 戰鬪指揮는 用兵術의 次元으로 昇華시키고 發展시켜야 한다. 그러나 用兵術의 본질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과학임과 동시에 상대방보다 앞선 創意性이 要求되는 用兵術의 領域이어야 한다.

2. 戰爭과 安保

가. 戰爭과 安保政策要素

戰爭의 주체는 人間이며, 戰爭은 人間關係에서 발생하는 투쟁현상이다. 人間形成의 구조적 기능은 社會的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인간개체의 구조적 기능이 情神과 肉體(物質)의 유기적인 결

3) Dennis M. Drew & Donald M. Snow, *Military Strategy*(Nabama, 1988), p. 20.

함으로 이루어졌다면, 人間の 情神機能은 政治와 社會心理分野로 발전하였으며, 政治의 대외적 手段으로서 外交分野와 軍事分野를 들 수 있다. 人間の 육체와 人間行動을 뒷받침하는 물질기능은 자원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經濟分野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戰爭目的과 目標은 政治와 社會心理的 要素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과 과학기술 등이 포함된 經濟的 要素를 고려하여 戰爭의 양상과 戰爭遂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戰爭遂行의 선행과업인 戰爭計劃樹立에 관한 성공적인 戰爭指導는 政治·社會心理·經濟分野에 대한 통합·조정과 外交와 軍事의 운용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때, 政戰略과 관련된 政治·社會心理·經濟·外交·軍事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戰爭指導 方法을 연구·발전시켜야 한다.

現代 戰爭은 國家 總力戰體制에 의해서 수행된다. 순수한 武力戰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軍事의 기능과 非軍事의 政戰略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政戰略 要素의 情神的 기능인 政治와 社會心理, 物質的 기능인 經濟力에 의한 자원과 과학기술, 그리고 戰爭遂行의 실제적 手段인 外交와 軍事를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여 체계적인 戰爭指導가 <표 1-2>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2> 戰爭指導와 政戰略 相互關係

구 분 \ 육하원칙	“왜” (목 적)	“무엇을” (목 표)	“어떻게” (방 법)	“물질적 수단” (능 력)
전 쟁 지 도	• 전쟁목적	• 전쟁의 정치목표 • 군사목표	• 전쟁외교 • 군사용병	• 군사정책(건설, 유지) • 군사지원
정 전 략	• 정치 • 사회심리	• 정치 • 군사	• 외교 • 군사	• 경제(자원, 과학 기술)

이를 위해 戰爭의 目的과 目標은 情神的 기능인 政治와 社會心理를 고려하여 戰爭의 目的과 目標가 설정되어야 하고, 설정된 目的과 目標를 달성할 수 있도록 外交와 軍事의 手段을 운용하여야 하며, 物質的인 기능인 經濟力에 의한 자원과 과학기술이 戰爭遂行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戰爭指導와 政戰略 설정은 ‘目的=목표=방법=능력’에 이르기까지 政治·社會心理·經濟·外交·軍事의 政戰略 기능의 諸要素가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상호협력과 조정을 통

한 유기적 순환과정을 밟아야 된다.

(1) 戰爭과 政治

政治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서, 國家 권력의 생산과 분배를 의미한다. 政治가 권력에 의한 권위적인 社會的 제가치의 배분을 특징으로 한다면, 戰爭이란 폭력적 手段에 의해 국제적 제가치를 배분하려는 특수한 政治現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각국은 國際社會에서 自國의 國家利益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自國의 意志를 타국에게 강요하기 위한 政治의 最後手段으로 戰爭을 선택한다. 즉, 폭력적인 軍事의 手段을 행사하여 自國의 國家利益을 강요할 수 있는 유리한 軍事의 상황을 조성하여 놓고, 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강화를 맺도록 하고 있다.

戰爭은 政治를 동기로 하여 발생하며, 政治的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이다. 戰爭의 手段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國家의 政治的 目標은 自國의 國家利益 추구이다. 戰爭은 승리가 최고 目的이 아니다. 승리 자체는 國家가 회구하는 政治的 目標인 國家利益 달성을 위한 手段이다. 따라서 軍事戰略은 戰爭의 政治的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國家戰略의 일부이다. 軍事戰略과 政戰略을 통합한 國家戰略은 政治指導者가 주도해야 할 분야로서, “政治的 動機가 戰爭의 原因이므로 軍事는 종속되어야 한다”⁴⁾는 클라우제비츠의 주장과 같이 戰爭指導는 國家 통수권의 次元에서 당연히 政治指導者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 戰爭과 社會心理

戰爭은 사회현상의 일부이며, 사회현상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戰爭行爲의 주체도 人間이다. 人間이 戰場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며 戰爭勝敗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軍事力의 주체인 軍隊는 각자의 의식을 가진 人間集團으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이다. 現代戰은 國家總力戰 수행체제로서, 武力을 행사하는 軍隊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戰爭에 참여한다. 더구나 민주주의 國家에서 군인은 국민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軍隊란 당연히 社會心理的인 문제와 밀접

4) Carl von Clausewitz,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23-24.

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軍隊는 그 국민성의 반영이며, 그 국민의 축소판이다. 국민이 강건하면 軍隊도 강건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子弟로서 軍隊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戰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상태나 사회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킬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영위해 왔던 생활관습과 제도를 지킬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국민에게 國家防衛의 決意를 요구할지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現代戰은 선진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유혹에서 협박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心理的 手段을 동원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의 저항의식을 파괴해 버리려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鬭爭 意志를 약화시키는 적의 어떠한 心理的 공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心理的 防衛能力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3) 戰爭과 經濟

(가) 國防費와 軍事力

戰爭에서 經濟分野 戰爭指導의 주안은 적절한 戰爭支援과 국민생활의 物質的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재산이 있을 때 비로소 國家防衛의 實質的 意志가 형성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이 國家防衛를 자기의 일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要因이 있다.

戰爭遂行을 위한 經濟的 기능은 물질의 양적 기반을 형성하는 자원과 군사장비의 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과학기술로 區分된다. 자원과 과학기술에 의한 經濟力은 軍事力 건설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軍事力 운용의 규모와 강도 자체를 결정하는 基本要因이 된다.

오늘날 세계 經濟情勢는 자원과 과학기술이 일부 國家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資本民族主義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국이 自國의 실리를 위해서 자원과 기술을 무기화하여 해외유출 통제를 심화시킴으로써 상호의존과 競爭 속에서 經濟戰爭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의 대다수 國家들은 自國의 繁榮을 위하여 國家間的 經濟交流에 의한 상호협력을 증대시키고 안정된 교류확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주도형의 國家는 자원의 수출입을 보호하기 위해

여 軍事力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戰爭遂行의 주체인 軍事力은 한 나라가 효율적인 기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인 인력과 자원을 軍事部分에 長期間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는 한, 건설·유지될 수 없다. 이와 같이 軍事力은 막대한 자원을 소요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手段이 바로 그 國家의 經濟力에 의한 국방비 지출이다. 一般的으로 國家防衛를 위해 소요되는 軍事費는 목전의 편익을 희생해서 미래의 영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이 本質的인 目的이다. 한 國家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국방에 가용한 手段과 자원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한 나라가 처하고 있는 國家安保環境과 國民經濟의 부담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經濟規模가 커야 軍事力 건설에 충분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經濟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經濟力과 政治·軍事의 相互關係

現代는 軍事力과 經濟力의 관련성이 더욱 긴밀하게 되고 있다. 經濟的 자급자족은 戰爭指導의 중요한 要素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본수출과 외국시장의 지배라는 형태를 취하는 經濟的 무기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행사된다. 이런 의미에서 經濟力은 政治勳力의 한 手段이기도 하다.

現代 國際社會에서 經濟大國으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政治力이 있어야 한다. 近代國家는 국력이 신장되면 될수록 단순한 시장지배를 넘어서 어느 정도 相對國을 政治的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해외시장의 지배만으로는 제3국에 의한 政治的 압력이나 직접적인 침략수단으로 시장지배 여건이 언제든지 방해받을 수 있고, 自國의 주권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의존에 의한 經濟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부응한 국제적 政治力量을 필요로 한다. 國際關係에서 經濟大國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外交力量을 확보해야 한다. 軍事強國이 되기 위해 國際關係에서의 外交力量은 經濟力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4) 戰爭과 外交

國家戰略의 次元에서 外交政策은 政治戰略의 대외적인 手段으로 활용한다. 이와 같이 外交政策과 軍事戰略은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政治의 대외적인 手段으로 效果的인 國家目

標達成에 기여한다.

一般的으로 外交政策이란 “한 國家와 다른 國家間에 평가할 수 있는 범위와 관계를 포함한 行動(action)과 決定(decision)으로 이루어진다.”⁵⁾ “한 國家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결정과 行動은 自國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國家利益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⁶⁾ 國家利益을 증진시키기 위한 外交政策은 종합적인 국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실현되는 것으로서 결코 外交力에 의해서만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으로 外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說得·妥協·威脅이라고 한다면, 外交政策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國家의 힘인 軍事力에 있다.

現代戰爭이 國家總力戰임을 감안할 때, 평시의 外交는 실질적으로 總力安保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전시 外交는 더욱 軍事와 뚜렷한 관계를 보여준다. 전시에 모든 國家의 노력은 戰爭 遂行을 위하여 집중되며, 軍事라는 폭력적인 힘과 外交라는 비폭력적인 힘이 相互作用을 하면서 발휘된다. 軍事力이란 國際政治 속에서 비전투적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對外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막후조정자’로서 상대방에게 강력한 威脅手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軍事力은 外交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政治的 과시이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外交的 도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軍事力은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힘으로 간주되고 있다.

國際政治의 手段으로서 軍事와 外交力 행사의 선후와 우선순위는 상대적 국력의 크기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 두 가지 戰略要素는 國家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떠한 要素가 어떠한 시기에 더욱 합리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강대국의 경우에는 軍事力이 뒷받침된 外交政策으로 弱小國家를 威脅·說得하여 自國의 國家利益을 추구하고 있다.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는 外交協商과 軍事力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侵略戰爭을 감행하였다. 侵略對象國家에게 충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건을 조작하여 軍事挑發에 의한 武力의 사용 내지 威脅을 가한 뒤 外交協商이 후속하는 모형으로서, 外交와 軍事를 밀접하게 통합하여 추진시켰다. 이와 같이 강대국은 國際關係에서 사건을 사전에 조작하여 이를 적절히 이용하고 난 뒤 침략 對象國家와의 外交協商의 실패책임을 相對國에게 전가시켜 武力侵略의 기회로서 활용하였다.

5) Joseph Frankel, *The Making of Foreign Policy*(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 1.

6) Charles O. Lerche, Jr., *Foreign Policy of American People*, 2nd ed.(Prentice-Hall : Englewood, 1961), p. 4.

나. 戰爭指導와 安保政策

(1) 戰爭指導 概念

‘戰爭指導’라는 용어를 문헌상에 최초로 명시한 사람은 일본의 이시하라(石原莞爾) 大佐이다. 그는 “戰爭指導란 戰爭에 있어서 국력의 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戰爭遂行시의 武力의 行使(統帥)와 武力行使 이외의 사항(戰時的 政治)의 양자를 조화시켜 戰爭目的을 달성하는 것으로 戰略과 政略을 조화·통일시켜 戰勝을 획득하는 것”⁷⁾이라고 정의하였다.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라는 관점에서 볼 때, ‘戰爭指導’라는 용어는 민주주의 國家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군의 통수권은 당연히 대통령이나 총리가 장악하여 행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戰爭指導라는 用語는 本質적으로 軍事的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政治的인 용어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도 戰爭指導란 “전시에 있어서의 국력운용에 관한 지표인 바, 戰爭遂行의 要綱과 武力行使에 따르는 통수 및 軍事戰略과 政治戰略의 통합·조정과 효율적 통제 등 戰爭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總力을 組織化하여 집중시키는 지도역량과 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⁸⁾

우리나라의 경우는 戰爭指導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대학원에서 발행한 「安保關係用語集」에서는 “戰爭指導란 전시에 있어서의 국력운용에 관한 지표로서 戰爭遂行을 위한 요강의 제정, 武力發動에 따르는 통수권의 행사, 國家戰略과 軍事戰略의 통합·조정 및 효율적인 통제 등 궁극적인 戰爭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 총역량을 戰勝獲得에 집중시키도록 組織化하는 지도역량과 기술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⁹⁾ 이는 國家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諸要素를 통합하고 軍事力을 조성·유지·운용하는 광의적인 戰爭計劃과 적의 武力侵攻에 대비하면서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의적인 戰爭計劃 등에서 戰爭開始, 戰爭遂行 및 戰爭終結과 같은 戰爭實行計劃에 대하여 주된 지도역량을 발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戰爭指導’라는 용어는 일본을 비롯한 일부 國家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미의 軍事學 理論體系에서는 戰爭指導에 관한 분야를 國家安全保障이나 軍事戰略의 범주에 포함시켜

7) 角田順(編), “石原莞爾 資料,” 戰爭史論(東京:原書房, 1968), p. 5.

8)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편, 국방실무용어집(서울: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2), p. 249.

9)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서울:국방대학원, 1985), p. 113.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戰爭을 ‘指導한다’는 말이 곧 國家의 軍事的 領域에 속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오히려 종합적인 ‘통치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國家安全保障의 概念과 대상은 軍事的 威脅 뿐만 아니라 광범한 분야에 걸친 다양한 威脅을 상정하고 있으며, 威脅의 시기도 평시의 戰爭抑制를 주안으로 하되 전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一般의인 戰爭計劃이나 ‘戰爭指導’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概念이다.

현재 한국이 적용하고 있는 戰爭計劃의 수립과 戰爭遂行의 指導는 武力戰 위주의 軍事戰略과 軍事政策分野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非軍事分野인 政戰略의 통합·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제 적용문제는 미진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현행 國家戰略體系와 軍事戰略體系에서는 유사시 國家總力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전시의 安保政策을 연계하고 政戰略과 軍事戰略을 조정·통합하여 전력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戰爭指導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國家安保分野 중 순수하게 戰爭分野를 별도로 분리시켜 戰爭을 ‘기획 - 계획 - 시행’에 이르는 戰爭 전반에 대해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2) 戰爭指導 方向과 安保政策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에 정립시켜 놓은 戰爭指導는 軍事優先의 絶對戰爭 概念을 적용하여 戰爭의 승리 그 자체에 주안을 두었다. 제국주의 侵略戰爭에서는 평시 國家目標 뿐만 아니라 전시에 적용될 戰爭目的과 戰爭의 政治的 目標가 모두 戰爭에서 승리하여 自國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일관된 概念에 집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戰爭指導는 평·전시 공히 戰爭에서 승리 자체를 目的으로 하여 政治·社會心理·外交·經濟 등 國家安保力量을 戰爭遂行 자체에 집중시켰다. 이는 戰爭遂行 중심의 國家總力戰 概念으로서, 보다 상위의 概念인 國家存立 目的인 영구적인 國家利益 추구보다는 戰爭遂行 자체에 초점을 맞춘 戰爭指導 概念으로 現代의인 戰爭指導 概念과는 차이가 있다. 최악의 경우 戰爭遂行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國家의 주체인 국민은 생존하여야 國家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戰爭에서 패배당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玉碎와 같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소중한 文化的 遺産을 공멸시키려는 戰爭指導 概念은 불식되어야 한다.

現代의인 戰爭指導는 國家存立 또는 國家目標와 동일한 概念의 戰爭指導가 아닌, 평시 國家目

標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戰爭의 수행과 戰爭指導의 目的이 國家利益 설정의 본질인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면, 戰爭目的과 戰爭의 政治的 目標設定도 평시의 國家目標 달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戰爭目的이 평시 國家目標과 별개의 것이거나 常置되어서는 안된다. 戰爭目的이 國家利益을 수호하고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國家目標과 戰爭目的은 일관성있게 연계성을 유지함이 필요하다. 만약, 戰爭의 目的과 戰爭의 政治的 目標設定이 國家目標 달성을 저해하여 국민의 행복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戰爭計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國家戰略 및 軍事戰略企劃體系를 중심으로 일관된 概念으로 戰爭計劃과 戰爭指導 概念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戰爭指導에서 평시와 전시를 연계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평시는 戰爭抑制에 주안을 둔 國家安全保障政策을 추진하고, 전시는 평시의 政治 연장으로써 國家目標 달성에 주안을 두되 적용시기와 범위는 전시의 戰爭遂行에 관한 분야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戰爭指導란 평시의 國家目標을 달성할 수 있는 戰爭目的을 설정하고, 國家의 총체적인 安保力量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戰爭을 이끌어 나가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現代의 概念에서 戰爭指導를 정의한다면 ‘國家目標에 부응한 戰爭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평·전시 國家安保政策인 政戰略과 軍令 및 軍政의 기획 - 계획 - 시행에 관한 제반 활동을 조정·통제·운영하기 위한 과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戰時 戰爭指導는 평시 설정했던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한 政治的 手段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戰爭指導에는 평·전시 安保政策과 戰爭計劃을 수립하고, 戰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戰爭遂行段階別로 軍事와 非軍事要素를 통합·조정하여 軍事作戰 수행을 지도하는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戰爭指導機構의 설치와 운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戰爭計劃樹立 및 戰爭指導는 國家 및 軍事戰略體系와 분리된 별도의 분야가 될 수 없으며, 이 속에 포함시켜 일관된 概念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연구·발전시켜야 한다. 전·평시 區分없이 戰爭의 威脅이 상존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安保環境下에서는 戰爭抑制와 國家防衛를 위하여 전·평시를 연계하여 國家總力戰을 대비하고 수행하기 위한 戰爭指導와 戰爭計劃樹立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Ⅲ. 韓國의 國家戰略과 安保政策

1. 韓國의 國家目標과 安保威脅

가. 韓國의 國家利益과 國家目標

(1) 韓國의 國家利益

(가) 韓國의 國家存立目的

現代國家의 사명은 국민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국가의 주인인 國民 多數의 소망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에 있다. 普遍的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精神과 物質의 기쁨 속에서 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公正하게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유스러우면서 번영된 생활을 영위하려는 인간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人間幸福의 기본조건을 보편적으로 정의한다면 平和, 自由, 繁榮, 平等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인간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으로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선행적인 권리이다. 평화라는 것은 不安과 恐怖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이다. 이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自由에 대한 인간의 욕구이다. 人間의 精神과 肉體는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원한다. 이는 他人의 抑壓으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하며, 後進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욕구이기도 하다. '인간이 번영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國民의 福祉向上으로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보장이 뒷받침됨을 의미한다. 빵과 자유를 모두 소유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 貧困은 인간의 건전한 생명과 정상적인 인간활동을 저해한다. 번영된 생활이란 貧困으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한다.

'평등한 權利와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公正하고 均等하게 보장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율과 創意力이 발휘되는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

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는 權力, 財力, 地緣, 血緣 등 각종 사회의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한다.

국가란 정치행위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는 데 가장 理想的인 社會機構이다. 오늘날 '국가없이 행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실감있는 說得力을 지니고 있다. 국가존립 목적은 '국민 모두가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機會均等を 통한 자유롭고 번영된 생활을 영위'하려는 국민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國泰民安과 國利民福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사명이라 볼 수 있다.

(나) 韓國의 國家利益

제2차 세계대전 직후 美·蘇의 戰後處理 過程에서 이루어진 남북분단 현상은 한국 국민의 염원과 相反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기본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북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 敵對關係의 지속은 항상 전쟁의 不安과 恐怖를 수반하여 한국국민 전체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으며, 남북 쌍방간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국력의 소모와 국제사회에서 남북한간 상호 적대적인 투쟁으로 인하여 韓民族의 긍지를 對內外的으로 損傷시키고 있는 것은 남북분단의 결과가 가져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시련과 낭비를 없애고 民族生存과 國家的 繁榮을 누리기 위해서도 남북한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통일은 인류역사상 인간이 실제로 체험하여 얻은 인간의 자유와 福祉增進, 그리고 인간의 사회활동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 할 수 있는 自由民主體制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主導下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와해되어 周邊國의 威脅으로 한국 국민의 생존권이 보다 위협을 받게 되고, 국민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억압을 받는 獨裁體制, 또는 국민생활의 빈곤을 자초하는 체제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면 남북통일의 실현을 국가적 지상과업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再考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한 통일은 원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국가는 존립하여야 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라고 평가되는 북한의 다원성이 결여된 唯一과 壓制와 貧困, 그리고 한국의 통합없는 分裂과 타락상이 그대로 합하여진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통일한국은 국가이익을 실현시켜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民主·正義·福祉國家로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여야 한다.

(2) 韓國의 國家目標

한국의 현재 國家目標은 1973년 2월 16일 國務會議에서 의결하여 공포한 내용으로서, 한국의 근원적인 國家利益과 당면한 국가이익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3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平和 · 自由 · 繁榮 · 平等에 대한 달성수준과 범위를 대내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1〉 한국의 국가목표

- ①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구적인 독립을 보전한다.
-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 ③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

國家目標 제1항은 國家生存權을 위한 정치와 군사분야 과업인 평화와 독립에 관한 대상과 수준을 順次的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분단 상황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守護는 國家保衛의 최우선의 과업으로써 한국의 國家存立 基本價値임을 명시하였다. 국가보위의 명분을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서 찾아야 한다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나 집단에게는 敵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분단 현상을 打破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祖國統一을 달성하여야 하며, 통일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영구적인 독립을 보전하여야 함을 국가목표로서 명시하고 있다.

國家目標 제2항은 국내적인 政治 · 經濟 · 社會分野에서의 국민의 基本權, 福祉增進, 平等權에 대한 국가적 달성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빈곤으로부터 해방,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불공정한 차별대우로부터 해방시켜 民主 · 福祉 · 正義社會의 實現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존립목적의 본질적 요건이다. 國家目標 제3항은 대외적인 국익증진을 위한 국가적인 과업을 제시하고 主權 獨立國家의 위상에 부합되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근간으로 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한 대외적인 공헌을 명시하였다.

나. 韓國의 安保威脅과 4強의 對韓半島 政策

(1) 韓國의 國家安保威脅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기본방향에는 國家安保 政策과 국민의 자유·번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일반정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國家安保政策이나 국가일반정책은 공동의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분리시킬 수 없는 보완적 관계로써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國家政策 기본방향은 광의의 국가전략개념인 평화·자유·번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國家安保政策과 국가일반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나, 협의의 國家戰略에서는 國家安保戰略의 개념과 대상을 國家生存權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시켰다.

國家安保의 개념은 ‘國家目標을 달성함에 있어 대내외의 제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제가치를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완수하여야 할 사명 중에서도 國家安保政策은 국민을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는 ‘국민의 생존권’에 주안을 두고 있다.

國家安保는 그 국가의 핵심가치를 대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안보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협’이다. 왜냐하면 안보란 결국 그 나라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만 할 귀중한 가치 — 생존, 주권, 번영, 생활방식 등 — 에 대한 파괴요인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안보의 개념에는 군사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경제적 차원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그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생존과 번영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목적을 지양함을 의미한다.

國家安保란 대내외적인 葛藤現狀과 관련을 갖는다. 國家安保에서는 彼我的 對象이 있으며, 彼我를 제외한 주변의 국제관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國家安保에 대한 위협은 敵國과 自國을 둘러싼 周邊國家들로부터의 외부적인 위협요인과 自國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내부적인 위협요인을 들 수 있다.

우리 한국의 5천년의 역사는 建國의 어려움 못지않게 국가생존을 위하여 외세에 대한 꾸준한 抵抗의 歷史이기도 하다. 국가 존립의 위협이 되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대응력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자기 국가에 대한 愛國心과 安保意識 有無가 必須的인 要因이기도 하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궁극적으로 그 국가 자신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2) 周邊 4強의 對韓半島 政策

韓半島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주변의 중국·일본·러시아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근래에는 미국이 주요 주변세력으로 등장하였다. 韓半島의 戰略情勢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은 韓半島의 지정학적 여건에 따른 4강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 4강의 對韓半島 戰略, 그리고 韓半島에서 적대적 대립을 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관계에서 설정될 수 있다.

한국이 통일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舊韓末과 같이 文弱할 경우에는 역사의 교훈에서와 같이 強大國의 분리흡수 대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나, 강력한 통일 한국이 등장할 경우에는 東北亞 勢力의 均衡者로서 해양세력을 동원하여 大陸勢力에게 敵對圈을 형성할 수 있고, 大陸勢力을 이용하여 海洋勢力에게도 대적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미국은 주변 4강 중에 지리적으로 韓半島와 근접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간접적인 역학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에 의한 共產統一은 일본에 위협이 되며, 한국에 의한 南北統一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남북분단 現狀維持 政策을 지속할지도 모른다. 중·러·일의 삼각관계를 조정·유지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韓半島의 남쪽만으로도 미국의 필요에 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단된 현재의 韓半島는 북으로부터 오는 大陸勢力의 기세를 韓半島 내에서 상쇄시켜 주어 일본방위의 일부를 대역해 주고 있으나, 韓半島가 통일되어 독자적인 선택폭을 넓혀 적대방향을 일본으로 轉換할 시에는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의 양면으로부터의 동시 위협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韓半島의 남쪽 해안과 일본은 비좁은 大韓海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어 재래식무기에 의해서도 일본 본토의 직접제압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은 통일된 강력한 한국보다는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분단된 韓半島의 안정이 일본의 國家利益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러는 韓半島와 접촉되어 직접적인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韓半島에 어떤 여건상의 변화가 발생하여 自國의 利益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시에는 이들 양국은 韓半島를 自國의 영향권 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북한의 남침전을 적극 지원할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東北亞 4強은 韓半島의 남북분단 現狀維持政策을 추진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勢力圈에 흡수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2. 敵國選定과 韓國의 安保政策

가. 敵國選定과 對象範圍

(1) 敵國選定の 必要性和 概念

국제 및 국내정치는 정치가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이 있는 곳에 彼我的 概念이 형성되며, 彼我的 概念은 敵對的 關係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현 안보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명시된 敵國이 없을 경우에도 군사적으로는 항상 假想敵國을 選定하여 최악의 국가안보환경에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敵國의 選定은 國家安保政策과 軍事戰略企劃을 구상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립하여야 할 선행적인 과업이다. 敵國의 選定對象에 따라 軍事戰略의 목표와 개념, 군사력 건설의 규모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敵國이 海洋國家일 경우에는 해군에 중점을 둔 군사력을 건설하여야 하며, 敵國이 大陸國家일 경우에는 지상군에 중점을 둔 군사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비록 현상황에서 인접국가와 우호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정치적으로 明示된 敵國이 없을 경우에도 항상 군사적으로는 최악의 국가적 상황을 설정하여 敵國, 潛在敵國, 中立國, 友邦國 등으로 구분하여 미리부터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독일과 프랑스의 외형적인 정치관계는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自國의 國家利益과 상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자들이킬 수 없는 적대관계로 돌변하였음은 역사의 산 교훈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군사적으로는 최악의 사태를 가상하여 假想敵國 또는 潛在敵國으로 간주하여 항상 은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國家安保政策上的 敵國은 실질적으로 명기된 敵國과 潛在的 敵國 또는 假想敵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인 敵國이란 군사적으로 휴전 및 교전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自國의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자행하여 自國의 國家利益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주는 국가이다. 假想 및 潛在敵國이란 현재는 비록 적대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양국의 영토, 주권, 국민생활면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많은 국가로서 상황이 조성되면 실제적인 敵國으로 변할 수 있는 국가와 自國의 敵對國家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국가이다.

(2) 韓國의 敵國選定對象과 範圍

韓國의 敵國選定은 國家目標 제1항의 위협요인에서 도출할 수 있다. 韓國의 실질적인 敵國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 및 전복하려는 집단이며, 韓國 주도의 평화통일을 방해 및 거부하고 영구적인 독립을 위협하는 국가를 假想 및 潛在 敵國으로 選定할 수 있다.

현재 북한 공산집단의 최종 목표는 全 韓半島의 武力赤化統一이며, 당면목표는 武力赤化統一을 달성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있을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의 최하목표는 북한에 건설된 공산주의의 보존에 있다. 이는 韓國의 국가목표 제1항과 정면으로 상치된다. 북한 공산집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하의 韓國의 국가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직·간접적으로 韓國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행하여 韓國의 國家利益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韓國안보의 절대적 영향권인 東北亞 地域은 4強(미·러·일·중)의 지역 霸權主義 登場으로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對韓半島 影響力 擴大競爭으로 평화통일의 저해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또한 韓半島에 대한 4強의 이해상충으로 東北亞 地域에서 전쟁 발생시에 韓半島가 패권투쟁에 연계될 가능성이 상존함으로써 4強은 韓國의 영구적인 독립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의 敵國選定の 범위는 자체의 안보역량으로 달성가능한 제한된 목표로 敵國의 範圍를 限定하고 縮小시켜야 한다. 적의 범위를 북한 공산집단으로 한정하고, 북한 공산집단 중에서도 호전적인 김정일 추종세력으로 적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戰略的 智慧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분리 및 차단시켜서 自國과 非敵對의이거나 友好的 中立關係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동맹 및 지원세력으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敵國에 대하여는 國際的 同盟關係를 형성하여 통합된 안보역량으로 북한을 축차적으로 각개격파시킬 수 있는 政戰略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 韓國의 安保目標와 政策方向

(1) 國家安保目標

韓國의 安保目標는 國家目標인 제1항과 제3항으로부터 명시된 임무와 추정된 과업으로 염출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①외부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독립을 보존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예상되는 政治戰과 外交心理戰 등의 間接侵略戰과 군사적 수단에 의한 대남 武力赤化統一 力量을 분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보전하고 지켜야 한다. ②한국 주도의 平和統一 與件을 造成하고 통일한국의 永久的인 獨立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東北亞의 地域的인 安定과 恒久的인 세계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國家安保目標로부터 國防目標 설정시의 目的 範圍는 명확하게 한정시키고, 國防目標의 대상은 결정적이며 달성가능한 핵심목표로 지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주변국의 직·간접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방목표는 실제 敵國의 무력침공을 가정하여 目的 範圍와 대상을 한정시켜야 한다. 한국의 國防目標에서는 일반적으로 國防目標 설정시에 제시되는 현대 군사력의 2대 역할인 전쟁억제와 국가방위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韓半島의 안보환경은 적이 무력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韓半島의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군사적 억제개념을 분명히 인식시켜 줌으로써 한국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북한이 동조하도록 군사력이 뒷받침하여 주어야 한다. 군사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운용의 정당성을 國防目標에 부각시켜야 한다.

韓半島의 안정과 평화는 東北亞地域의 안정과 평화에 직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東北亞의 地域的인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여 국제사회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國際的인 地位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國防目標는 ①敵의 武力侵攻으로부터 國家를 保衛하고, ②平和統一을 뒷받침하여, ③地域的인 安定과 世界平和에 寄與한다 — 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國家安保政策 基本方向

國家安保의 概念은 ‘國家目標를 달성함에 있어서 대내외의 제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諸價値를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國家安保의 對象은 평화와 독립에 관한 國家生存權을 주안으로 하고 있다. 國家安保政策은 통상적으로 國家安保狀況의 不確實性을 전제로 한다. 국가의 안보상황이 不確實할수록 군사적 논리에 의한 전략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보정책의 추진원칙은 정상적이고 낙관적인 國家安保狀況을 가정하여 안보정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최악의 국가적 안보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대비함으로써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國家安保狀況에서 이상적인 최상위의 안보상황으로 발전시켜 自國의 利益을 극대화시

킬 수 있도록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한국은 國家安保環境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보환경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통일 전에는 북한을 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통일 후에는 東北亞地域의 安定과 韓半島 平和를 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하여 3大 革命力量인 北韓內 革命力量 強化, 國際的 革命力量 強化, 南朝鮮 革命力量 強化策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北韓內 革命力量 強化’를 통하여 김정일 유일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을 대남적화전략의 수행기지로 계속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國際的 革命力量 強化’를 통하여 국제적 지지세력을 확대하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한국이 자주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전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요하려는 分離孤立化 策略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韓國內 革命力量 強化를 통하여 한국 내부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성하여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유도하려고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 이전까지 한국의 안보정책추진 개념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정책인 ‘3大 革命力量 強化’ 책략과 연계된 대남무력남침 전략을 분쇄하고,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위한 한국정부 주도의 평화정착 노력에 북한이 동조토록 유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韓半島의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자체내 安保力量強化, 國際的 安保力量強化, 그리고 對北韓 安保力量強化 政策이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가) 韓國 自體內 安保力量 強化

통상 國家安保政策의 전개는 일차적으로 自國의 내부적인 위협요인 제거로부터 출발한다. 國家安保 狀況에서 최악의 사태를 조성할 수 있는 自國 내의 정치·사회·경제면의 불안정 상태는 그 원인의 규명과 적절한 안보정책 추진으로 안정시켜 정상적인 國家安保環境을 정착시킨 후, 이를 더욱 향상·발전시켜 상대적 우월을 달성함으로써 최상위의 國家安保環境에서 國家目標 달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평시부터 부국강병책은 전평시를 망라한 최상위의 國家安保政策이며 國家安保態勢이다. 북한의 ‘韓國內 革命力量 強化’ 책략을 근본적으로 분쇄하는 방법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선결과제이며, 군사면에서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손자는 軍形의 章에서 “옛날에 善戰한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이편이 승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편에 달려 있

고, 이편이 승리하는 것은 적군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여 安保態勢의 基本原則을 強調하였다. 평소부터 臨戰態勢를 갖추고 있으면 적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1) 政治·經濟·社會面 : 安定과 發展

自國 내의 내부적인 위협요인은 政治·社會心理·經濟面의 불안정에서 발생한다. 정치면에서는 권력구조의 배분 不均衡으로 獨裁勢力이 형성되어 國民의 基本權이 억압되고 공정한 정치참여의 기회를 상실할 때는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어 民主化鬭爭이 시작된다. 社會心理面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들이 조화와 균형을 통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간, 계층간, 남녀간, 노사간에 갈등이 심화될 때 사회적 불안정상태가 조성된다. 經濟面에서는 경기침체로 기업인이 의욕을 상실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때 경제적 불안정상태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내부적 불안정은 國家安全保障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여 외부적인 위협마저 끌어들이 수 있게 된다. 또한 自國의 내부적인 위협과 주변국의 외부적 위협은 相互作用을 통하여 위협상황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政治·經濟·社會가 안정되어 있으면 북한의 대남책략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한국 자체의 내부적인 위협요인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불가능하다. 韓半島의 통일이 전쟁에 의한 北韓의 赤化統一인가? 아니면 한국 주도의 自由民主主義 體制下의 平和統一인가? 하는 것은 한국 자체내의 정치·경제·사회의 안보역량에 달려 있다. 한국의 安保力量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하여 安保態勢面의 主導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軍事面 : 自主國防態勢 確立

군사면에서 自主國防態勢는 韓美聯合防衛態勢를 근간으로 하여 북한의 무력남침 야욕을 억제하여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북한이 同調하도록 하는 데 두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하여 量的으로는 對等하더라도 質的으로는 優位의 전력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만약 북한이 외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을 할 경우에는 한국도 우방의 지원없이 한국 자체의 군사력에 의해 1:1로 격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自主國防은 單獨 國防의 概念이 아니고 韓美聯合戰力을 최대로 활용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自主國防態勢를 확립하기 위한 한국자체내 군사정책으로는 한미 軍事同盟政策, 常備戰力에 대

한 國軍 現代化政策, 動員豫備戰力에 의한 國民總力 防衛政策 등을 들 수 있다.

(나) 國際的 安保力量 強化

북한의 國際的 革命力量強化 策략을 분쇄하고 남북한 상호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國際的인 安保力量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정치·경제·사회·군사 등이 통합된 국가적 安保力量을 안보외교에 집중시켜 북한과의 상대적인 국력차에 의한 國威를 국제사회에 선양시키고, 국가 안보외교의 다변화를 통하여 한국에 유리한 國際的 安保環境을 조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과 아의 대상이 구분되면 전쟁지도원칙인 集散動靜의 원리를 적용한 군사적 논리에 의하여 국제관계에서 國家安保外交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國家安保政策은 통상적으로 최악의 국가적 안보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대비책을 발전시킴으로써, 최악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國家安保狀況을 조성토록 유도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최상위 국가 安保狀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 對北韓 安保力量 強化

한국의 對北韓 安保力量 強化政策은 대남적화혁명기지인 北韓地域을 한국의 平和統一政策 추진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과 호전적인 김정일 追從勢力과의 分離政策을 발전시켜야 하며, 북한의 개방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북한 주민 스스로가 남북한의 政治·經濟 體制를 비교하여 ‘體制選擇의 自由’를 북한 주민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의 對北安保力量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의 對北韓 安保力量 強化는 자주국방태세 확립이라는 대북한 軍事政策을 통하여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韓美聯合 防衛體制를 공고히 유지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무력도발시는 自滅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의 對南 心理戰을 차단하고 對北 心理戰을 강화하여야 한다. 政治·心理的인 군비축소 제의나 韓美間의 同盟關係를 약화시키려는 대남 심리전을 차단하고, 북한 지도체제와 중간관료층, 그리고 주민을 분리시킬 수 있는 政治戰과 外交心理戰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 먼저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 한, 북한 체제유지에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북한에게 주지시켜 북한 스스로 자발적인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IV. 韓國 軍事戰略企劃의 發展方向

1. 韓半島의 戰場環境과 戰爭類型

가. 韓半島의 戰場環境

韓半島 安保環境의 영향요인으로는 韓半島 周邊情勢, 韓半島의 지정학적인 위치, 남북한의 전장환경, 彼我能力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1) 韓半島 周邊情勢面

韓國安保의 절대적 영향권인 東北亞地域은 4強의 地域 패권주의 등장으로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韓半島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4強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狀況에서 남북한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무력통일 시도는 韓半島가 4強의 국제전으로의 전장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전략정세를 고려한 軍事戰略의 기획과 戰爭指導가 요망된다.

(2) 地政學的 與件

東北亞地域에서 韓半島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4強은 통일된 韓半島보다는 분단된 韓半島의 안정을 유지하는 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韓半島 통일은 비무력전의 효과를 활용한 평화적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에는 무력전으로 외세가 개입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韓半島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軍事戰略의 企劃과 戰爭指導가 요망된다.

(3) 南北韓의 戰場環境

韓半島에서 남북한은 각기 韓半島의 통일을 원하며, 남북분단에 의한 現狀維持政策은 원하지 않고 있다. 남북한의 대적관계는 동일민족간의 정치체제를 둘러싼 政治戰의 대결이므로 무력전 수행과 병행한 정치전과 외교심리전의 효과를 최대로 통합할 수 있도록 軍事戰略企劃과 戰爭指

導가 요망된다.

韓半島는 남북으로 33°에서 43°, 동서로는 124°에서 131°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680km, 동서로는 352km로서 22만km²의 국토면적을 갖고 있다. 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할 때 공격 및 방어의 작전 중심이 400km 이내로서, 남북한 공히 全地域에 걸쳐 동시 전장화가 가능하다. 해안선의 총길이는 8,693km로 北韓地域은 2,991km(33%)이고 南韓地域은 5,702km(67%)이다. 이와 같이 광정면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를 대비한 對해상침투 및 對상륙방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 韓半島에서 豫想되는 戰爭類型

韓半島에서 예상되는 戰爭類型은 결정적 시기 이전의 혁명전과 국지전, 그리고 결정적 시기 이후의 직접적인 무력에 의한 全面戰으로 대별할 수 있다. 戰爭類型은 전쟁이 전개될 韓半島 자체가 갖는 전장환경의 특성, 전쟁의 수행성격에 따른 외세개입의 정도, 彼我的 전쟁수행능력 등에 따라 이들 형태의 단독유형이나 통합유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 革命戰爭

북한의 革命戰爭에 의한 간접침략위협은 북한의 사주, 조정 아래 한국의 自由民主主義 政權을 타도하고 弱體中立 내지 親共政權을 수립하게 한 후 협상 형식으로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내의 지하당이 주도한 반정부 대중투쟁이나 자연발생적 반정부운동에 편승하여 現政權을 打倒하고 親共政權을 수립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접촉과 협상을 통해 한국 내에 침투하여 국민을 분열시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混亂을 造成하거나 南北 聯邦制의 실현을 통해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한국 내에 非正規戰 部隊, 特攻隊, 間諜 등을 침투시켜 기존 지하세력을 규합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도시에서의 顛覆活動, 농촌에서의 유격전을 전개하는 革命戰爭方式이다.

革命戰爭은 현대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적화전략을 위한 가장 최선의 戰爭類型이다. 共產革命戰爭은 유격전을 위주로 하는 비정규전 형태로 전개되며, 그 특성은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이 밀접히 결부되어 수행된다는 데 있다. 非正規戰에 의한 대남도발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

추세, 사회적 안정, 安保體制 등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이 유지되는 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나 어떤 계기로든지 한국 내부에 불안정한 狀況이 조성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局地戰爭

북한에 의해서 예상되는 국지전 유형은 정치적 목적 뿐만 아니라 작전규모와 作戰地域을 일정한 범위에 한정시키는 전쟁이다. 韓半島가 주변 4대강국의 利害相衝地域으로서 어느 일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戰爭類型은 북한이 어떤 特定地域을 선제공격으로 단기간 내에 기습적으로 강점한 후 주변세력을 개입시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른바 선점령 후협상의 가능성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局地戰은 首都圈地域, 休戰線 一帶地域, 서해도서에 가해지는 국지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한 國際輿論의 악화와 한국민의 敵愾心을 고취시킨 응징보복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쟁목적을 한정시킨 국지전은 북한으로서 채택하기 어려운 戰爭類型이다. 오히려 特定地域에 대한 국지침공으로 전쟁을 개시하여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戰爭類型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敵對國의 戰法과 戰力 및 防衛態勢를 探索하고, 적대국민에게 심리적 타격을 가하여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全面戰爭시 성공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前哨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상대국민간의 패배의식이 노출되어 國民精神力이 약화될 때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다.

(3) 全面戰爭

북한이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戰爭類型은 비핵 재래식전쟁이나, 핵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며, 중·러의 지원을 받거나 북한단독의 전면 남침전이 될 것이다. 중·러의 지원을 받는 全面戰爭 위협은 처음부터 중국이나 러시아의 사주 또는 지원하에 全面南侵을 감행하는 경우와, 단독 남침후 제3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중·러가 지원하여 전쟁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러, 한·중관계가 友好中立關係로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중·러 공히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와 안전을 희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여건변화가 없는 한, 현단계에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單獨 全面戰爭의 威脅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북한에 유리하고 제3

국이 介入可能性이 없다고 판단할 때 중·러의 지원없이 북한 단독으로 전면 남침을 전개하는 경우로서 북한의 구축된 군사력으로 볼 때 採擇可能性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어떠한 戰爭類型選擇도 全面武力南侵으로 확대 발전될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군사적 대비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韓國 軍事戰略企劃의 發展方向

한국의 軍事戰略은 평시에는 韓半島에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와 심리전에 주안을 둔 對北 戰爭抑制戰略이나, 전쟁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국가를 방위하고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력전에 의한 積極防衛戰略이어야 한다.

軍事戰略企劃은 전쟁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軍事戰略目標을 설정하고, 軍事戰略目標을 실현할 수 있는 軍事戰略 概念을 도출하며, 軍事戰略概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군사력 운용소요를 설정하는 데 있다. 韓半島에서 북한이 남침진을 감행하였을 경우를 예상한 한국의 軍事戰略企劃은 장차전 양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軍事戰略을 전망한 후, 이를 분쇄하고 우리의 군사적지를 북한에 역으로 강요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軍事戰略을 기획하는 데 있다.

가. 戰爭目的과 軍事戰略目標

(1) 北韓의 戰爭目的과 軍事戰略目標

남북한은 6·25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지금까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남북한간 적대관계 지속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 북한 공산당의 전쟁관은 한마디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革命戰爭論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民族解放戰爭은 그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正義의 戰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은 이와 같은 戰爭觀에 입각하여 남침전쟁의 목적은 한국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는 ‘民族解放戰爭’으로 설정하고,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全 韓半島의 武力赤化統一’에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軍事戰略目標은 한·미연합군 주력의 저항력을 박탈하기 위하여 수도권 전방에서 韓美

野戰軍 主力(敵部隊)을 격멸하고, 首都圈(敵意志)을 조기에 탈취하여 한국국민의 전쟁의지를 말살한 후, 한국의 全國土(敵領土)를 점령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2) 韓國의 戰爭目的과 軍事戰略目標

앞으로 예상되는 제2의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전쟁목적은 평시에 설정한 한국의 國家目標를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는 데 있다. 한국의 전쟁목적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고, 무력통일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北韓地域까지 확대시켜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데 있어야 한다. 또한 무력침략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전쟁 후의 통일조국에 평화·자유·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쟁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①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②조국의 失地를 회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한다.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軍事戰略目標는 적 공격으로부터 아측의 저항력을 보존하는 防禦概念과 적의 저항력을 동시에 박탈하는 概念이 망라되어야 한다. 적 부대면에서는 我 주력부대의 생존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首都圈 전방의 적 주력부대와 적 제2, 3체대를 격멸하여야 한다. 敵 意志面에서는 我 의지의 상징인 수도권의 절대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 의지의 상징인 적 수도(평양)를 조기에 탈취하여야 한다. 敵 領土面에서는 현 한국의 국토를 방위함과 동시에 北韓地域의 失地를 회복하여 韓半島를 통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남북한간의 전쟁목적, 전쟁의 정치적 목표, 軍事戰略目標는 <표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1> 남북한의 전쟁목적과 군사전략 목표 비교

구 분		북	한	한	국
전 쟁 목 적		· 민족해방전쟁		· 자유민주주의체제 보존, 확대 · 침략에 대한 응징 · 전후의 평화·자유·번영 증진	
전 쟁 의 정 치 적 목 적		· 전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 적의 무력침공으로 국가보위 · 실지회복, 자유민주주의하 국토통일	
군 사 전략 목표	부 대	· 수도권 전방에서 한·미 야전군 주력 격멸		· 아 주력부대 생존성 보장 · 적 주력 및 적 2, 3체대 격멸	
	의 지	· 수도권 조기 탈취		· 수도권 절대 안전권 확보 · 적 수도 탈취	
	지 형	· 한국의 전국토 점령		· 현 한국 국토방위 · 북한지역 실지회복, 국토통일	

나. 軍事戰略概念

軍事戰略概念은 설정된 軍事戰略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천시와 지리를 활용하여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책이어야 한다. 軍事戰略概念의 選定은 彼我간 천·지·인물요소의 상대성과 한계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음을 기술한 바 있다.

(1) 北韓의 軍事戰略概念

(가) 時間要素의 活用

1) 戰爭開始時期

북한은 한국 내부의 정치, 사회혼란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거나, 駐韓美軍의 撤收 등으로 군사력 균형이 파괴되었다고 판단하였을 시에는 決定的 時期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언제라도 남침전을 강행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潛在力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장기간 무리한 군사비 지출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고, 남북한 국력의 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주요 노후장비 교체와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군사비 부담은 限界點에 도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逆轉되기 전과 노후장비 교체시기 도래 전에 무력사용의 욕망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戰爭開始季節 選定은 남북한간 특정한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늦가을에 개전하여 冬季作戰으로 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다. 늦가을에 개전하는 방안은 非正規戰의 운용효과를 통한 특수작전과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한 추수 이후의 현지 군수조달 및 기계화부대의 기동용이성, 그리고 미군등 외세개입으로 인하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고려할 때 초기 冬季作戰의 有利性을 이용하여 정치협상시 유리한 여건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북한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開戰開始曜日의 選定은 한국국민의 심리적 해이효과를 이용한 최대한의 기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2~3일 연휴 또는 토~일요일을 選定할 가능성이 높다. 최초 攻擊開始時間의 選定은 일과시간 내의 주간공격을 회피하고, 야음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비정규전에 의한 특공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간공격에 적합한 공격개시시간을 選定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選定할 수 있는 전쟁개시시기는 북한과 한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역전되기 이전이

거나 한국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었을 때, 가급적 늦가을의 토·일요일의 후반야 여명에 기습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2) 戰爭持續期間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戰爭持續期間은 5~7일간의 단기결전에 의한 속결전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이 단기전에 의한 속결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군사 잠재력인 인적·장비·군수능력면의 제한과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국내외적인 부정적 반응 때문이다. 특히 4強的 조기휴전 강요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전 이후 현 전선에서 휴전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전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북한에 불리한 狀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이 韓國軍의 동원 및 미군의 개입 이전에 속전속결에 의한 短期決戰으로 전쟁을 종결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空間要素의 活用

1) 攻擊開始 地域과 核心 戰場

북한은 250km에 달하는 현 휴전선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광활한 해안선을 지상과 해상 攻擊開始地域으로 활용할 것이며, 핵심전장은 한강이북의 수도권과 야전군 地域으로 한정하려 할 것이다.

2) 戰場의 範圍

북한은 초전에서부터 전장의 범위를 전후방 同時戰場化로 速戰速決에 의한 短期 決戰을 수행하기 위해 전장의 범위를 천 국토로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다) 軍事力 要素의 運用

1) 開戰方法

북한의 開戰方法은 기습공격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화통일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韓半島 赤化統一의 최선의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초전 기습공격의 성공 여부가 전승의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믿고 있는 軍事集團이다.

또한 북한은 독재자에 의한 엄격한 단일 政策結晶構造를 가지고 철저한 對外秘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개전방법으로 기습을 감행함에 있어서 거의 국내적 반대나 비판에 구애받지 않는 집단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침전을 개시할 때, 최소의 재배치하에서 현 군사 배비태세로 기습공격에 의한 작전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2) 軍事力 運用

북한의 군사력 운용은 立體機動戰의 正規戰과 特殊戰 部隊의 非正規戰을 배합하여 立體機動戰을 수행할 것이다. 북한은 개전 직전 특공대, 간첩 등을 침투시켜 지하세력을 통합한 후, 한국 정부의 전복을 꾀할 것이며, 이의 성패여부와 관계없이 개전과 동시 또는 직후에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지상, 해상, 공중으로 침투시켜 아 후방에 제2전선의 형성을 기도할 것이다.

1969년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經步兵部隊를 재편 강화하고 무장의 경량화를 위한 보병화기의 개발, AN-2기 등 非正規戰部隊의 공수를 위한 경항공기의 도입, 산악전과 야간침투를 위한 장비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戰 遂行에 광분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다.

북한의 軍事戰略概念은 기습공격을 근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積極防禦戰略을 병용하고, 단기결전을 시도하는 速戰速決戰略을 근본으로 하되 持久戰 戰略을 병용하며, 또한 正規戰과 非正規戰을 배합하는 이른바 배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3) 戰爭終決方法

북한은 전쟁외교협상을 병행한 전쟁종결방법보다는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전으로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여 남한을 強占한 후, 이를 國際的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완전한 무력전에 의한 戰爭終決方法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2) 韓國의 軍事戰略概念

(가) 時間要所의 活用方策

1) 開戰時期

한국의 전쟁개시시기 選定은 적의 공격개시시기와 자동적으로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의 공격개시시기 選定은 아측의 국가 安保態勢와 군사력 전비태세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아 아측에 유리한 시기에 전쟁이 개시되어야 한다.

남북한간에 전쟁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여야 하나, 북한의 武力南侵으로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對北 抑制力量을 행사하여 시기적으로 유리한 여건에서 전쟁이 개시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한국측이 북한보다 安保 및 軍事力量面에서 유리한 시기가 조성되었을 때 북한은 무모한 남침전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戰爭持續期間

한국이 설정할 수 있는 戰爭持續期間은 장기지구전과 단기속결전을 假想할 수 있다. 북한에 비하여 잠재국력의 크기면과 북한의 공격충격력을 효과적인 방어작전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지구전의 선택이 북한보다도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지구전 수행에는 막대한 국력소모로 인한 국가의 파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외세개입에 의한 조국통일의 호기를 상실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戰爭持續期間을 단기속결전으로 選定하여야 할 것이다.

시·공간적인 특성면에서 볼 때,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국부적이거나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여 國際的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휴전에 의한 불리한 현상으로 고정시켜 버린다면, 초전에 정상적인 방어작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이점은 불리한 것으로 변해 버릴 것이다. 특히 韓半島의 경우 미·러·중의 간섭으로 조기휴전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상유지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택하는 데 시·공간면에서 결정적인 제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형적인 방어 중심이 짧으면서, 강대국의 간섭에 의한 조기휴전의 가능성이 높은 韓半島의 전장환경으로 보아 어느 때라도 ‘現前線에서의 休戰’을 강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방어작전 공히 速戰速決에 의한 短期決戰이 요구된다.

(나) 空間要所의 活用方策

1) 攻擊開始地域과 核心戰場

현 휴전선과 동서남해의 해안선이 초전의 攻擊開始地域이 될 것이다. 또한 적의 초기공격을 攻擊開始地域에서 방어함과 동시에 핵심전장을 적지로 전환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조기에 전환하여야 한다.

我地域 방어작전과 적지 공격작전의 동시 병행 概念을 채택하여야 할 이유로는, ①한국의 수도권에 이르는 작전중심의 결여로 정상적인 방어작전 遂行概念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②적의 지대내 미사일 사정권 내에 수도권이 위치함으로 인한 취약점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초전에서 서부터 적지전장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③주변 강대국의 개입으로 현전선에서 早期休戰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여야 하며, ④현대 군사교리의 발전추세와 최신 무기체계의 효과면에서 敵地縱深地域에 대한 동시반격 작전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기 작전수행을 위한 핵심전장의 選定은, ①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初期接敵地域, ②初期豫想接敵地域 후방의 기동타격계대 集結地域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핵심전장을 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初期接敵地域을 選定할 시에는 북한이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진지준비와 보강을 해놓은 영구진지의 재사용을 허용하게 되어 아측의 반격작전 수행 시 막대한 손실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소저항선과 최소예상선을 활용하는 戰爭指導原則에 위배된다.

전쟁초기 接敵地域 후방의 기동·타격제대의 豫想集結地域을 핵심전장으로 選定할 경우에는 ①상호 예기되는 地域에서의 결전을 회피하는 최소예기선이 될 수 있으며, ②적이 사전준비한 진지의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最少抵抗線을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③수도권 전방으로 집중하는 주공격제대의 측후방을 위협함으로써 적 주공격부대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적의 兵站線과 後退路를 차단하여 적의 편성과 배비의 전환을 강요할 수 있게 된다. ④또한 적 1제대의 작전성과를 후속하여 확대하려는 기동·타격제대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거부함으로써 首都圈의 위협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2) 戰場의 範圍

한국이 卽應反擊作戰을 실시할 때 동시전장의 범위는 전국토인 압록강·두만강 선으로 할 것인가? 한국의 가용 군사력에 의한 능력과 작전수행의 효과, 외세개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作戰地域의 실제범위를 청천강선 이남으로 설정하여 작전을 단계화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초기 전장의 범위를 압록강·두만강 선으로 할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전쟁에 介入名分을 줄 수 있으며, 가용한 군사력을 과도하게 분산시킴으로써 首都圈 前方의 적 주력부대에 대하여 軍事力量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初期 戰場의 범위를 청천강선 이남으로 한정하는 것은 전국토의 동시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初戰에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전 개입명분을 자극하지 않고, 수도권 전방의 적 주력부대와 평원선에 연하는 적 2, 3제대의 기동타격부대에 대하여 군사적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유리점을 가질 수 있다.

(다) 戰鬥力 要素의 運用

1) 開戰方法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選定할 수 있는 개전방법으로는 ①기습공격, ②자위적 선제공격, ③적의 공격개시와 동시 즉응반격, ④지체없이 방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國家目標과 국내외적인 狀況을 고려할 때, 전쟁개시방법은 공격형태보다는 방어형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적에게 기습공격을 허용할 시에는 초전에 괴멸적 피해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초전에 작전주도권을 적에게 허용할 경우, 작전수행에 결정적인 불리점을 감수하게 될 뿐이다.

또한 방어적 개전방법인 ‘遲滯없이 防禦’와 같은 수세적 對應概念은 적의 도발의욕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측의 심리적 위축과 작전수행의 소극화를 초래하여 초전에 괴멸적 피해를 좌초할 수 있다. 한국의 개전방법으로 공격형태를 적용하는 기습공격이나 예방전쟁 성격의 자위적 선제 공격은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인식과 명분은 전쟁목적과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國際的 지지나 국민의 전의를 획득하는 데 역작용을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군사교리와 무기발전 추세, 그리고 휴전선으로부터 작전중심이 결여된 首都圈의 脆弱性으로 인한 전장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의 將次戰 趨勢는 공격과 방어가 각각 독립된 작전형태가 아니고 동시에 통합된 작전형태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選定하여야 하는 개전방법은 공격작전의 형태가 아니면서도 수세적인 방어형태가 아닌 ‘적의 공격개시와 동시에 적지 즉응반격’의 概念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軍事力 運用方法

남북한간 전쟁양상에서의 군사력 운용방법은 순수한 무력전 수행차원을 벗어난 민·관·군의 공동참여를 위한 국가총력전 遂行概念인 戰力運用概念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現戰線과 後方地域에서 북한의 군사력 運用概念인 正規戰과 非正規戰에 南韓地域에서 방어전투로 대응할 뿐 아니라 북한의 縱深地域에 대한 동시전장확대를 위해서는 군사력과 비군사력에 의한 전력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한국의 後方地域은 地域單位別 민·관·군 공동방위에 의한 향토방위전투가 수행되고, 前方地域은 상비군에 의한 거점중심의 결전방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敵地縱深地域에서도 지·해·공 입체작전이 수행되도록 통합전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 軍事力 運用所要

한 國家가 平戰時에 보유할 군사력 소요는 國家가 설정할 國家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이와같이 國家保衛를 위하여 國家가 軍에 부여한 軍事力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에 따라서 軍事力의 所要는 달라진다. 北韓과 韓國의 國家目

標에서 기대하고 있는 군사력의 역할에 따라 軍事力の 所要概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北韓의 軍事力 運用所要

현재 북한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北韓勞動黨은 그들의 勞動黨 規約全文에, “당면목적은 共和國 北半部に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전국적 범위(전체 한반도)에서 反帝, 半封建의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共產社會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백하게 全 韓半島의 共產化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全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武力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세위주의 군사력을 소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의 量과 質면에서 한국보다 앞도적인 軍事力の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北韓은 6·25 韓國戰爭 말기 때, 현 휴전선과 비슷한 작전정면에 中共軍 21개 사단과 北韓軍 6개사단 등 27개 사단을 보유하여 前方에 배치하여 방어하고, 공격제대로서 45개 사단을 보유하여 총 72개 사단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韓半島에서 南北韓間 戰爭이 재발시에도 작전정면이 250km 내외로 한정될 것을 고려한다면, 공격 제1제대로 최소한 25개 사단과 제과공격으로 기동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격 제2, 3제대로서 50개 사단을 편성하여 최소한 75개 사단으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공격제대를 지원하기 위한 海空軍부대와 전투지원부대, 그리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대규모 動員豫備戰力을 소요로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GNP 25~28%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계속하여, 정규군 115만과 예비군 745만 등, 전주민의 약 37%를 무장세력으로 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기 및 장비의 지속적인 증강과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표 3-2〉 참조).

(2) 韓國의 軍事力 運用所要

한국의 대북한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軍事力 所要는 國家目標 제1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북한의 무력남침을 격퇴하여 國家를 보위할 수 있는 防衛戰力 수준과 祖國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抑制戰力 수준, 그리고 北韓의 무력남침을 한반도의 실지회복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攻勢戰力 수준을 군사력 소요로 하여 단계적으로 군사력 소요를 충

〈표 3-2〉 남북한 군사전략 개념 비교

구		분	북	한	국
시 요 활	간 소 용	개 전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적 시기 도래시 • 남북 군사력 균형역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개전시기와 동일 • 한국에 유리한 시기 유도 	
		전쟁 지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결전 	
공 간 소 용	활	개 시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휴전선 및 한국의 전 해안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휴전선 및 북한의 전 해안선 	
		핵 심 전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전방지역 • 적 기동·타격체대 집결지역 	
		전 장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방 동시 전장화 (한국의 전영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북한지역 동시 전장화 ※ 청천강선 이남지역 단계화 	
군 사 력 요 소 활	용	개 전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습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공격개시와 동시 즉응반격 	
		군 사 력 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전과 비정규전 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총력전 수행개념 • 현 휴전선 : 결전방위 • 후방지역 : 민·관·군 공동방위 • 적지 : 지·해·공 입체 전격전 	

족시켜 나가야 한다.

韓國의 自主國防에 의한 軍事力建設의 개념과 수준은 韓美聯合 抑制戰力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北韓의 軍事力에 비하여 量的으로는 동등하고, 質的으로는 우위의 戰力을 확보하여 북한에 무력남침에 대한 自主國防態勢를 확립하는 수준으로 軍事力 所要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V. 結 論

일반적으로 理論은 關聯業務의 발전을 先導하여야 하며, 理論은 實際業務의 적용을 통해서 修整되고 補完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理論은 實際業務와의 관계속에서 존재하면서 그 有用성이 立證되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興亡盛衰와 직결되는 전쟁의 실재를 다루는 戰略과 戰爭指導理

論은 전장의 실제에서 적용되어 그 有用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韓國的인 戰略理論과 戰爭指導概念이 정립되어야 한다. 韓國的인 戰略理論은 보편적으로 가장 常識的이며 科學的이고 體系的이어서 論理性和 合理性을 갖추어야 실제의 적용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 有用성을 檢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한국 軍事戰略企劃의 方向은 한국의 國家戰略으로부터 戰爭目的, 軍事戰略目標, 軍事戰略概念, 軍事力所要를 합리성과 실증성있는 이론에 의하여 科學的이고 體系的으로 도출하여 실무부서 및 用兵家로부터 共感帶가 형성되어야 한다. 軍事戰略企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國家戰略構想 過程에서 핵심과업인 國家利益과 國家目標, 國家安保威脅과 4強의 對韓半島 政策, 敵國選定の 對象과 範圍, 國家安保政策에 관한 理論과 實際面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戰略과 戰爭指導에 관한 科學化와 體系化를 시도했던 軍事戰略學理論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의 방향을 도출한 후, 한국 軍事戰略企劃의 發展方向을 제시하였다.

역사는 飛躍하지 않으며, 비록 시간은 단축할 수 있어도 겪어야 할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 것처럼, 한국의 국가전략을 體系的으로 정립하여 一貫性있게 軍事戰略企劃의 發展方向을 작게 5027의 상위개념으로 제시한다면 전략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軍事的 自信感을 확대시켜 나감은 물론 軍事先進國의 自負心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科學的인 理論化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軍事分野 學者들과 실제업무부서 요원들과의 공동 연구노력과 도전, 그리고 科學的인 理論의 누적을 통하여 戰略體系上的 實際業務를 科學的인 理論과 부합되게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單行本)

- 국방대학원, 「국방실무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2.
- _____, 「安保關係用語集」, 서울 : 국방대학원, 1995.
- _____, 「安全保障理論」, 서울 : 국방대학원, 1996.
- 권양주, 「政治와 戰爭」, 서울 : 21세기 군사연구소, 1995.
- 김영태 외, 「韓國戰爭指導體제의 發展方向」, 서울 : 국가안전보장회의, 1993.
- 本郷 建, 「戰爭의 哲學」, 국방대학원 역, 「戰爭哲學」, 서울 : 국방대학원, 1982.
- 辛正道, 「戰略學 原論」, 서울 : 동서병학연구소, 1970.
- 신정현 편, 「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서울 : 나남출판, 1996.
- 육군교육사령부, 「戰爭指導 理論과 實際」, 대전 : 교육사령부, 1991.
- 李光憲, 「現代社會와 心理戰略」, 서울 : 파일, 1993.
- 최경락 외, 「國家安全保障論」, 서울 : 법문사, 1989.
- 최종기, 「韓國外交政策」, 서울 :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8.
- 河大憲, 「軍事戰略學」, 서울 : 을지서적, 1998.
- 角田順(編), 「戰爭史論」, 東京 : 原書房, 1968.
- Amos A. Jordan and William J. Taylor, J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cess*, Baltimore: The Johns Hopkin University Press, 1981.
- Charles O. Lerche, Jr., *Foreign Policy of American People*, 2nd ed. Englewood: Prentice-Hall, 1961.
-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李昊宰 譯, 「現代國際政治論」, 서울 : 法文社, 1988.
- Henry E. Eccles, *Military Concepts and Philosoph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65.
- Joseph Frankel,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England: Gower Publication Co., 1983.

- Oppenheim, *International Law*, Vol. I, 8th, London: Longman, 1962.
- William Grsham Sumner, *War*, Vol. 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4.
- Wolfram F. Harieder, *Comparative Foreign Policy*,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1971.

(論文 및 研究報告書)

- 배명오 외, “戰爭指導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1984.
- 최경락, “國家安全保障論,” 국방대학원, 「安全保障理論」, 서울: 국방대학원, 1991.
- 최병갑 외, “戰爭指導에 관한 研究,” 政策研究報告書, 서울: 국방대학원, 1984.
- 河大憲, “戰爭基本計劃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서울: 국방대학원, 1994.